



백신 접종해야 하는데... 공공 숨은 불법체류자들

도내 미등록 외국인 1만여명 중 2900명만 백신 접종
“불이익 주지 않겠다” 설득해도 단속될까 접종 기피

제주도가 불법 체류 외국인(미등록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약 70%가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로 하면서 남은 기간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속도가 남아있지만 도내 상당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접종 자체를 꺼리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으로 2900여명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 받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은 사실상 올해 4월부터 시작했다.

제주도는 국적,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올해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후 3월까지 약 한달간은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상대로 우선 접종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2~3월 접종 대상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없다.

제주도는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1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를 고려하면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약 70%가 백신 접종을 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도 현실에선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출입국관리법 84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런 사실 알려 강제 퇴거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한시적으로 백

신 접종에 참여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이런 통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이유로 혹시 모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임시관리번호를 받으려면 직접 보건소에 가야하는데 이들은 이런 공공기관 방문부터 꺼리는데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단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백신 접종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상당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받게 되면 자신의 기록이 행정 전산망에 남아 (그 기록들이) 추후 단속에 쓰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외국인 공동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함안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최근 이를 사

이 41명이 감염돼 비상이 걸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파손된채 방치된 중앙분리대 6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진입로 일부 구간엔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파손된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강희만기자

■ ‘1999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판 ‘국민참여재판’ 절차 밝나...

피고인 “강제송환될때부터
수사기관 날 범인으로 단정”

검찰 “증거 명확...자신있다”
법원 “검토 사안 많아” 난색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50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의 반론을 듣는 ‘공판기일’로 예정됐지만,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준비기일’로 변경됐다.

이날 김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검찰에서도 확증 편향 가져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한국에 강제 송환된 뒤 수사기관이 진행되는 절차를 봤을 때 이미 나를 살인범이라고 도장을 찍어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려를 드러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한 번의 공판으로 선고까지 마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김씨의 공소사실 적용부터 실제 살인 가담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 측 증거만 160개인 데다, 1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한 번에 출석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변호인 측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건이 한 번의 국민참여재판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 재판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 배심원의 비밀유지도 어렵게 되는 등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향해서는 “지인에게 들은 얘기를 방송에서 말한 것일 뿐 실제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은 다르다. (검찰처럼) 확증 편향을 가진 상태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고민하길 바란다”고 타일했다.

김씨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고민해보겠다. 현재 국선인 변호인도 사선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무방하다는 기존 의견을 재검토해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일반재판으로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7일 연속 한자릿수 유지

6일 오후 5시 기준 8명 코로나19 확진
탐라문화제 도외 공연단 확진자 발생

제주지역에서 7일 연속 한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날 개막하는 제60회 탐라문화제 도외 공연단 관계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5시 현재 8명(2915~292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4명, 타지역 입도객 1명,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2명 등이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중 1명은 ‘제주시 외국인 교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 외국인 교회’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제60회 탐라문화제 도외 공연 진행요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개막공연이 전면 취소됐다. 해당 확진자는 입도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제주아트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 있던 아트센터 직원을 비롯해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원·스태프 등 37명에 대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격리 조치를 내렸다.

확진된 진행요원은 제주아트센터 외 다른 공연장은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타 공연장에서 예정된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아트센터에 대한 정밀방역과 시설 폐쇄조치도 완료됐다.

한편 >16-17세(2004~2005년생) 청소년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 접종(부스터샷)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 16-17세 사전예약 대상자는 1만3959명으로 오는 29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며,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시설 입소·종사자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추가 접종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5일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자에 대한 중증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강다혜기자

제주소방 코로나 관련 이송 1만건 돌파... 월 평균 593건

제주소방이 코로나19 관련 이송 실적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60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1월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환자(확진자·의심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총 1만 1852건에 달했다. 이를 월 평균으로 따지면 593건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송 건수는 6699건으로, 지난 한 해(5153건) 이송 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전동킥보드 불법운행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6~7일 이틀 간 제주 전역에서 제주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강다혜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명(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명(레드향)	1년생
병자묘	1년생

유라조생 접수분양계약

한림종묘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왕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맛1호, 명유자,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병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력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부터 형성된 뿌리순상 방지
▶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대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종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릉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릉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